

## 中國의 改革과 宗教\*:

국가의 종교정책, 민간의 종교활동, 지방의 종교통제

전 성 홍

### I. 서 론

### II. 중국의 종교관과 毛, 鄧의 종교정책

### III. 민간 종교의 활성화와 국가의 정책 대응

### IV. 종교 통제의 형태:

제도 및 조직적 통제와 지방 행정

### V. 결 론

## I. 서 론

중국은 1949년 이후 종교에 대한 이중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이라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종교를 '인민'의 계급성과 혁명성을 약화시키는 아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단일국가

---

\* 본 연구는 1995年度 教育部 地域研究支援金으로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본 논문에 대해 많은 도움 말씀과 관련자료를 소개해 주신 중국복음선교회의 한운숙 연구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자율과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그들을 소위 '통일전선' 정책하에 흡수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중국은 종교를 배척하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통치이념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 인정과 현실적인 억제정책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런 정책 기조하에 중국의 종교정책은 건국 초기, 社會主義改造期, 문화대혁명, 개혁 시기 등 각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달리해 왔다. 특히 개혁 시기 중국의 종교정책은 天安門事件을 전후하여 그 정책기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목표로 과거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로 수정한 鄧小平의 실용주의노선이 제기된 개혁 초기에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기치하에 종교활동에 대한 완화된 정책으로의 변화를 보여 주었는데, 이로써 중국사회내에서는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각종 종교가 부활되고 종교 및 신앙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한 문혁기에 파괴되었던 각 종교의 사찰들이 복원되고 있고 교리의 재정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당국의 억제정책을 우려한 각 종교단체들이 신도수의 공개를 꺼려할 정도로 종교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천안문사건 이후에는 1991년의 '通知', 1994년의 '規定' 및 '條例' 등의 관계법령을 통해 또다시 종교에 대한 통제 강화로 전환되었다. 이런 변화는 기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변화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개혁 10여년 간의 국가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1979년 농촌의 농가생산책임제, 1984년의 도시 기업개혁, 1987년의 사회주의초급단계론, 1992년의 사회주의시장경제론 등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록 경제개혁보다는 느린 속도와 강약의 변동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치적 영역에서도 黨政分離, 政企分離, 權力下放 등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종교

정책에서만은 오히려 강경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 몇가지 문제들을 고찰함으로써 개혁 이후 중국에서의 종교정책 및 집행, 그리고 민간의 종교활동을 이해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자율과 개방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혁노선하에서 종교 정책의 기초는 무엇이며 이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천안문사건 이후 종교정책은 왜 보다 경직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는가, 지방단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집행시 종교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종교활동이 받는 구조적 제약은 무엇인지 등이다.

종교문제는 중국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기존 연구들이 개혁 후 중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을 강조하는 바 종교활동 역시 국가에 대한 사회 자율과 힘의 증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단체들의 선교활동 보고서나 종교정책 관련법규의 번역서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제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만 지방레벨에서의 종교정책 집행과 사회통제 형태에 대한 분석은 四川省 및 北京 지역의 道教를 대상으로 행한 현지조사의 결과를 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도교는 중국의 토착종교로서 외래종교에 비해 중국정부가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이런 도교에 대한 국가통제는 기타 종교에 대한 통제와 그 정도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참고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중국의 종교관과 毛, 鄧의 종교 정책

### 1.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종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無神論의 원칙하에 종교문제를 취급해 왔다. 종교란 본질적으로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 원시시대의 인간이 초인적인 존재에 의지하려는 심리적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환상적인 세계관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 발전단계에 있어서 근대 이후 계급사회에 와서 종교는 피착취계급으로 하여금 착취의 고통과 절망적 상태를 초인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착취계급이 이를 이용하여 인민대중을 통제하는 중요한 정신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다고 본다.<sup>1)</sup> 다시 말해 종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치계급이 '신의 뜻'이나 '신의 권위'로써 스스로를 미화시키고 피착취계급인 인민의 계급의식과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써 소위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된다.<sup>2)</sup> 그리고 사회주의사회하에서 종교는 생산력과 정신문명의 발전에 따라 인민들의 사상과 문화의 수준이 향상되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이와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체계내에서 종교는 부정되었으며, 혁명 이후 중국에서도 구체제의 타파라는 취지에서 종교에 대한 탄압과 통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종교란 정신세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적인 강제력만으로 인위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종교가 존재해 왔다. 사적 소유의 철폐가 사적 이윤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긴 하였으나 이윤 추구의 동기 자체를 소멸시키지 못한 것과 같이 종교에 대한 통제 역시 그것의 역사, 사회, 인식상의 근원을 무효화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특히 소수민족의 경우 종교는 생활 및 풍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종교에 대한 부정은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종교에 대한 중국의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적

1) 林遠, [統一戰線概論](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7), pp. 161-162.

2) 馬克思, “헤겔법철학비판,” [馬克思恩格斯選集] (第1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2), p. 2.

3) 林遠(1987), p. 164.

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종교가 다음 5가지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위 ‘宗教五性論’으로서 종교는 群衆性(대중성), 民族性, 國際性, 長期性, 複雜性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이는 1950년대에 처음 제기되어 현재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시기의 종교문제를 인식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종교정책을 제정할 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는 기본 방침이자 정책의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즉,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종교를 제도적 틀내에서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毛澤東은 모순론에서 정치적, 이념적 모순은 적대적이고 주요한 모순이며, 종교적 모순은 비적대적이고 부차적인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종교에 대한 이런 해석은 공산당이 국가의 제일차적 과제인 주요 모순과의 투쟁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차적 모순들과는 연합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장기간에 걸친 연합과정에서 종교는 그것의 주관적, 관념적, 미신적 성격을 치유하고 점차적으로 객관적이고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종교가 현실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바로 ‘統一戰線’의 논리이다. 統一戰線이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노동자 및 농민 외에, 지식인, 소수 민족, 해외 동포, 종교인, 민주당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모든 세력과 전략적으로 연합하여 그들을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혁명과 건설에 있어

4)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俞朝卯, “論‘五性’是馬克思主義宗教觀的堅持和發展,” [宗教](南京大學宗教研究所), 1992년 제1기, pp. 22-30.

5) 龔學增, “馬克思主義宗教理論與中國共產黨對他的繼承, 豐富和發展,” 中共中央統戰部二局, 中共中央黨校教務部 編, [新形勢下的民族, 宗教問題](北京: 人民出版社, 1994), p. 242.

6) Jonathan Chao, 중국어문선교회 편역, [중국 선교 핸드북](서울: 두란노, 1993), pp. 74-75.

서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sup>7)</sup> 따라서 종교에 대한 용인도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宗教의 社會主義化'를 추구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종교의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2. 毛澤東 시기의 종교정책

이런 종교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정책노선에 따라 억압과 관용의 상대적 강조를 달리함으로써 상이한 종교정책을 추진해 왔다. 상이한 시대 상황과 국가목표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에 따라 종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정책의 기조를 띠기도 했고 관용과 유화적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혁명 이후 중국에서의 종교정책은 크게 개혁 전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개혁 이전 毛澤東 시기가 종교에 대한 통제 정책을 기조로 했다면, 鄧小平 시기의 개혁노선하에서는 관용정책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혁명 후 중국정부는 기존의 각 종교단체들을 해체하고 사회주의 제도에 재조직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50년에 自治, 自傳, 自養이라는 소위 '三自愛國運動'을 전개하였고, 신부, 수녀, 목사 등 종교인을 구금하였으며 교회, 성당, 수도원 등이 폐쇄되고 종교서적의 간행은 금지되었다. 1949년 토지개혁법(土地法大綱) 공포에 따라 불교의 사원과 종교단체의 토지는 국유로 몰수되었고, 도교의 도관들이 철폐되었다.<sup>8)</sup> 이와 동시에 일부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종교인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종교단체들을 조직하였다. 그 목적은 기존의 종교단체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략에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당과 국가의 종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종교단체가 솔선수범하

7) 이에 대해서는 林遠(1987) 참조.

8) 汪學文, [中共與宗教](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86), p. 60.

여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기독교의 ‘三自愛國運動委員會’를 비롯하여 각 종교단체들은 소위 ‘愛國 宗教組織’의 관리하에 제한적인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국가의 정책이나 요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종교인은 ‘反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투옥되거나 공장 및 농장에서 ‘勞動改造’를 받아야 했다.<sup>9)</sup>

특히 ‘10년간의 대재난’으로 불리우는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소위 좌경적 이데올로기의 기치하에 종교인에 대한 박해와 종교활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 뿐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유적지와 문화재에까지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각 지방에서는 ‘無宗教縣 건설’, ‘無宗教區 건설’ 등의 구호하에 종교가 소멸된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위해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였다.<sup>10)</sup> 홍위병들은 신자들의 집을 수색하여 성경 등 종교서적을 압수하고 불태웠으며, 종교인과 신자들은 ‘反혁명분자’로 규정되어 거리로 끌려나가 비판받거나 강제노역에 처해졌다.

### 3. 鄧小平 시기의 종교정책

#### 1) 관용정책의 제기과정과 배경

文革의 좌경적 급진사상과 그 정책적 착오를 비판함으로써 등장한 鄧小平의 개혁노선은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제시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개혁정책의 기초하에 종교에 대한 국가정책도 보다 관용적인 태도로 변화되었다. 과거의 탄압 일변도의 정책은 종교가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인 평등사상, 도덕의식, 애국심, 이타심 등 사회주의사회에서 고양해야 할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부정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기존 정책은 인민들

9) 중국어문선교회 편역(1993), pp. 62-63.

10) 林遠(1987), pp. 179.

의 종교활동과 종교의식을 일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종교적 신앙을 견고히 하게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자수가 증가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반성에서였다. 억압적인 종교정책은 무엇보다 인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므로 사회안정과 민심확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지도부는 종교에 대한 보다 큰 폭의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경제건설의 국가목표와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종교정책을 추진하였다.

1978년 11월 人民政治協商會議에서는 1957년에 숙청된 10만명의 인사들을 복권시켰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신부를 포함한 종교인들이었다. 1979년 6월 華國鋒 총리는 [第5次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기존 통일전선 사업의 착오를 비판하였다. 당 지도부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태도는 민간 학계와 종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으며, 당, 정부, 종교인, 학자들로 구성된 각종 회의가 개최되어 새로운 종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논의되기도 했다.<sup>11)</sup>

이런 개혁기의 새로운 종교정책은 1982년 당중앙 '제19호' 문건으로 집약되어 각급 기관에 하달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기의 종교 문제에 관한 기본 관점과 기본 정책”(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이라는 題下의 이 문건은 종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기본 정책방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에 근거해 각 지방 黨政 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12)</sup>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문건은 개혁 시기 중국 종교정책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건은 과거보다 완화된 종교에 대한 관용정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각종 제한 규정이 동시에 병존해 있는 특징을 지니

11) Tony Lambert, *The Resurrection of the Chinese Church*, 김창영·조은화 역, [중국 교회의 부활](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pp. 44-57.

12) “中共中央印發‘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的通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長春, 人民出版社, 1982), p. 1219.

고 있다.

## 2) 1982년 '제19호' 문건

첫째, 종교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과거 종교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 역효과를 가져왔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종교를 허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교가 궁극적으로 소멸되지 전까지의 잠정적인 형태의 허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이 소멸됨에 따라 종교가 존재하게 되는 계급근원이 이미 기본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발전은 항상 사회 존재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구사회가 남긴 구사상, 구관습은 단기간내에 철저히 소멸될 수는 없다. ... 아직도 일정 범위내에 존재하는 계급 투쟁과 국제환경으로 인하여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존재하게 될 것이다. ...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교는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장기간에 걸친 발전을 통하여 모든 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자연 소멸되는 것이다. ... 사회주의 제도의 건립과 경제 문화의 일정 정도의 발전에 따라 종교가 곧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명령 혹은 기타 강제적 수단으로써 종교를 단번에 소멸시키겠다는 생각과 방법은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과 위배되는 것이며, 완전히 잘못된 매우 해로운 것이다.”<sup>13)</sup>

둘째, 종교 자유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비록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는 있으나, 대상과 장소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즉 종교는 철저히

13)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82), p. 1221.

개인적인 일이며, 종교활동은 일정 장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당의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이다. … 종교 신앙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시에 의미한다. … 공산당원은 무신론자로서 흔들림없이 무신론을 선전해야 하나 사람들의 사상과 신앙의 문제를 대할 때 단순하게 강제적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해롭게 된다는 것이다. …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금지해선 안되며 다만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가 국가행정, 사법 및 교육을 간섭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이미 철폐된 종교의 봉건적 특권과 착취제도를 회복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어떤 사람 특히 18세 이하의 소년 아동에게 입교, 출가, 사찰에서 경을 배우게 하는 것 등을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 종교를 이용해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나 국가통일과 각 민족간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sup>14)</sup>

셋째, 중국에서의 종교활동의 성격과 종교단체의 임무를 규정하였다. 특히 自傳, 自治, 自養이라는 종교의 ‘三自’ 방침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외부 세계와 단절된 종교의 자율적 성장 원칙을 강조하고, 국가정책 집행에 있어서 종교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교회의 제국주의 세력을 척결했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부터 신도들의 독립자주적인 설립에 의한 종교사업으로 변화시켰다. …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이 반동 시기의 통제와 이용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했다. … 또한 국가에서 인정한 각 종교단체들의 기본 임무는,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 집행에 협조하고, 신도대중 및 종교계 인사들이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고양하도록 도와주

1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2), pp. 1225-1226.

며,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조직함으로써 당과 국가가 종교계 인사들과 연결되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sup>15)</sup>

넷째, 종교활동은 종교사무국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장소내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정된 장소, 종교인 등에 의한 종교활동을 규정한 기존의 ‘三定’ 원칙의 재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종교활동 장소는 정부의 종교업무부처의 행정지도하에 종교조직 및 직업 종교인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 기독교도의 가정집회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강압적으로 제지해서도 안되며 애국 종교인을 통해 신도대중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sup>16)</sup>

다섯째, 해외 종교교류가 중국사회에 가져올 충격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교류에 있어서 반드시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국제 반동세력이 중국의 종교를 조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외국 단체가 제공하는 종교적 선전물이나 경비 원조 등을 받아서도 안된다.”<sup>17)</sup>

이상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개혁 시기 종교정책의 기초로서 추진되어 왔다. 비록 1983년 ‘정신오염척결운동’, 1987년 ‘자산계급자유화반대운동’ 등의 정치적 보수노선하에서 다소의 통제가 있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종교에 대한 관용정책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종교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89

1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2), pp. 1223-1224.

1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2), p. 1230.

1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2), p. 1237.

년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종교에 대한 관용정책은 다시 통제강화로 전환되었다.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한 개혁 시기에 종교정책이 다시 보수노선으로 회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이다.

### III. 민간의 종교 활성화와 국가의 정책 대응

#### 1. 종교 활성화와 그 효과

##### 1) 종교 활성화의 원인 및 현황

중국에서의 종교정책은 종교활동이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그에 근거한 대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개혁 후 유화정책이 취해졌고, 이런 유화정책이 종교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면 종교에 대한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순환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개혁 초 유화적 정책이 천안문사건 이후 보다 통제적인 정책성향으로 변화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 불안정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첫째, 개혁 이후 종교는 하나의 '불'(宗教熱)을 일으켜 종교인이 숫적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 계층의 보편화, 연령의 확산화, 지역적인 광범위화 추세를 보임으로써 중국 당국의 '체제내 관리'를 어렵게 하였다는 사실이다.<sup>18)</sup> 물론 종교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개혁에 따른 국가의 종교정책 변화가 자율적인 종교활동의 공간을 확대시켰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 개혁의 부수적인 효과들도 종교에 대한 일반 인민들의 인식과 태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무엇보다 '市場化' 개혁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18) 王嗣岳, 韓雲燾 역, "정치사회 환경에서 본 중국대륙 기독교 신자 증가 원인," [중국과 교회], 1993년 3-4월호, pp. 16-20.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약화시켰다. 즉 혁명 초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통치에 대해 가졌던 신념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불신으로 변화되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信仰의 위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信念의 위기', '공산당 통치(領導)에 대한 信任의 위기' 등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중국사회에서 대두된 소위 '三信危機' 현상이 개혁의 추진에 따라 보다 가속화되었다.

경제발전을 통해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경제발전의 성과 이면에 나타나는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 개혁의 결과로 인해 초래된 三信危機 현상은 역설적이라고 하겠다.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교육을 통한 사상적 통제는 그 효과가 갈수록 약화되고 이를 대체해 배급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등의 부정적 사조가 만연하는 한편, 정신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 적잖은 사람들이 미신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 및 심령적 활동에 기대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기능 약화와 함께 개혁은 黨政 기관의 조직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져 왔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실시된 농가생산책임제는 기존의 人民公社를 통한 집단생산과 공동생활 방식을 타파하고 농가 단위의 생산과 자율적인 생활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위 기층조직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 및 宗族 세력이 대두되어 기층 지방조직의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외의 종교단체들이 개혁 개방의 완화된 분위기하에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해온 것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선교사들은 종교 교리의 전파 뿐 아니라 장례, 질병치유 등 신앙의 실천과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시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구 종교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혁에 따른 정책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기능 약화에 따른 새로운 정신적 안식처의 필요성, 선교활동 등의 요인들은 중국에서 종교를 믿는 신앙인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중국의 직업 종교인과 신도의 통계 숫자, 그리고 그 변화 추세는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 발표를 꺼려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신도수가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1982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각 종교에 종사하는 직업 종교인은 5만 9천명이다. 그 중 불교의 승녀, 비구니, 라마가 약 2만 7천명, 도교의 남녀 道士가 약 2천 5백명, 이슬람의 직업 종교인이 약 2만명, 그리고 천주교 약 3천 4백명과 기독교 약 5천 9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9)</sup> 그리고 종교계 인사의 추산에 의하면 1990년 현재 각 직업 종교인은 약 18만 여명 정도이다.<sup>20)</sup>

그러나 중국에서 종교인과 신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특히 신자수는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신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현재 약 1억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 뿐 실제 종교를 믿는 신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다. 1982년 정부의 부분적인 공개에 의하면, 이슬람교도가 1949년 혁명 직후 약 800만에서 약 천만 명으로, 천주교도가 약 270만에서 약 300만으로, 기독교도가 약 70만에서 약 300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불교와 도교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sup>21)</sup> 1990년 8월 國務院 宗教事務局 자료에 근거하여 [新華社]는 불교신도가 약 1억, 이슬람교도 약 2천 만, 기독교인 약 500만, 천주교인 약 400만 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1994년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교인이 약 1,700만 명, 천주교인이 약 400만, 기독교인이 약 700만 명으로 추산함

19) 중국어문선교회(1993), p. 213.

20) 陸雲(北京週報)編著, [中國宗教百題問答](北京: 新星出版社, 1990), p. 1.

21) 중국어문선교회(1993), p. 207.

22) Xinhua News Agency-News Bulletin, 1990. 8. 1.

으로써 통계숫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sup>23)</sup> 외국 선교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한 자료는 國家統計局의 미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불교신도가 약 1억, 기독교인 6천3백만, 천주교인 약 1천2백만 명을 포함하여 전체 종교인이 약 2억 정도라고 한다.<sup>24)</sup>

중국 지도부는 종교를 믿는 신도수가 비록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나 사회주의체제에서 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무신론의 사상적 입장을 견지하는 공산당은 당규약에서 당원의 종교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당원 중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종교와 신앙 문제로 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sup>25)</sup> 1990년 중국 내부자료를 인용한 홍콩 [爭鳴]지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984-86년과 1987-89년 사이에 공산당에 가입한 자와 기독교를 믿는 신자 수의 증감을 비교한 결과 전자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후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조)

1995년 1월 18일 당중앙 組織部 및 紀律檢查委員會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도시 및 연해지역의 경우 7-9%의 당원이 종교조직에 가입하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天津, 大連, 西安, 重慶, 武漢, 福州, 海口, 青島, 深圳 등 도시 지역에서는 종교인의 증가율이 당원 증가율 12.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원 및 그 가족 중 약 18% 이상이 종교조직에 가입하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3) 張聲作, “關於宗教方面的幾個問題,” 中共中央統戰部二局, 中共中央黨校教務部 編 (1994), p. 268.

24) *China News and Church Report*, No. 2026(1992. 9. 25).

25) 이런 사례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참조. *South China Morning Post*, 1993. 3. 12; “當前某些地方黨員, 幹部和幹部家屬信徒的增多,” [報刊文摘], 1990. 8; [保定日報], 1991. 6. 7.; [時報], 1991. 3. 14.

또한 대도시 지역의 종교 및 신앙 생활자 가운데 고등교육(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전체의 39.2%로서 민주당과 인사들의 학력(78%가 고등교육 수학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대도시 공산당원의 학력(18.8%)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퇴직 지식인 및 전문직 종사자의 23.3%가 종교조직에 가입하거나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직 간부의 경우 7%에 달한다.<sup>26)</sup>

그밖에 종교인의 숫적 증가에 있어서 청소년과 지식인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도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3개 鄉鎮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학교 및 중학

<표 1> 10대도시의 공산당 가입자 및 기독교 신도수의 증감비교  
(1984-86 / 1987-89)

| 도시별 | 증감내용 | 공산당 가입자 수<br>(%) | 기독교 신도 수<br>(배) |
|-----|------|------------------|-----------------|
| 北 京 |      | - 45             | + 2.7           |
| 天 津 |      | - 80             | + 2.5           |
| 瀋 陽 |      | - 80             | *               |
| 西 安 |      | - 80             | *               |
| 上 海 |      | - 28             | + 1.9           |
| 廣 州 |      | - 75             | + 2.5           |
| 重 慶 |      | - 50             | + 3.3           |
| 成 都 |      | - 14             | + 6             |
| 南 京 |      | - 70             | *               |
| 武 漢 |      | - 35             | *               |

\* : 자료 미비

출처 : [爭鳴], 1990년 제4월호.

교 재학생 8,419명 중 약 10%인 871명이 종교를 믿고 있으며, 그 중

26) [爭鳴], 1995년 제5월호, pp. 21-22.

중학생이 26.2%, 국민학생이 73.6%를 차지하고 있다.<sup>27)</sup> 1990년 江西省의 한 현(戈陽縣)의 楊橋 국민학교 128명의 학생 중 1/3인 42명이 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sup>28)</sup> 종교신앙의 '低齡化'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sup>29)</sup> 또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北京, 上海, 天津, 廣州 등 연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지식인의 종교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sup>30)</sup> 예컨대 上海市의 경우 1987-90년 사이에 세례를 받은 청년 기독교인의 수는 15,000명인데 이는 전체 상해 기독교인의 1/4에 달하는 것이다.<sup>31)</sup>

종교의 활성화는 종교인의 숫적 증가 외에 종교관련 단체와 기관의 증설에서도 나타난다.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와 각 지방 分會가 부활되었고, 과거 폐쇄되었던 종교 교육기관이 부활되거나 신설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약 300여만 권의 聖經을 제작,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각 종교단체에서 경전 출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sup>32)</sup> 각 종교단체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와 국가의 정책, 종교활동 현황, 종교연구의 결과물 등을 게재하는 각종 종교 전문잡지들을 출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音], [佛教文化], [中國道教], [中國穆斯林], [中國天主教], [天風] 등이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불교, 도교, 이슬람교에서 출판하는 간행물들은 국내외에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반면에, 천주교와 기독교 관련 서적은 해당 종교의 내부 발행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방 세계의 종교가 중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별한 경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7) “關於制止一些地方利用宗教活動妨礙教育問題的通知,” [中國與教會], 1993년 제88기, p. 12.

28) [東方日報], 1990. 11. 7.

29) 王嗣岳, “中共對宗教工作重視與態度,” [亞洲研究], 제4기(1993. 7), p. 49.

30) 黃維軒, “從政府的宗教文件看最近的宗教政策,” [中國與教會], 제91기(1992. 9-10), p. 3.

31) [文匯報], 1990. 1. 4.

32) 陸雲 編(1990), p. 24.

&lt;표 2&gt; 종교관련 정기간행물

| 잡 지 명 | 출판기관             | 창간일   | 출판주기 | 발행부수(문자)                  |
|-------|------------------|-------|------|---------------------------|
| 法音    | 불교협회             | 1981년 | 월 간  | 15,000(중문)                |
| 佛教文化  | 불교협회             | 1989년 | 연 간  | *                         |
| 中國道教  | 도교협회             | 1957년 | 계 간  | 13,000(중문)                |
| 中國穆斯林 | 이슬람교협회           | 1957년 | 격월간  | 15,000(중문)<br>1,000(위글문자) |
| 中國天主教 | 천주교애국회<br>및교무위원회 | 1980년 | 계 간  | 10,000(중문)                |
| 天風    | 기독교애국회<br>및기독교협회 | *     | 월 간  | 40,000(중문)                |

\* : 자료 미비

자료: 陸雲 編(1990), pp. 12-14.

## 2) 종교 활성화의 정치사회적 효과

이런 종교의 활성화는 정치사회적으로 중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교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첫째, 종교문제는 소수민족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종교의 활성화는 티벳, 신장 등 일부 소수민족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비록 漢族이 전체 12억 인구 중 약 93%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나 약 1억 인구의 55개 소수민족이 포함된 多民族 국가이다. 그리고 면적에 있어서 각 소수민족 자치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국토의 절반을 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민족간의 단결없는 국가통일을 유지할 수 없고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없는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sup>33)</sup> 이들 소수민족은 개별 민족 특유의 언어, 습관,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일부 지역은 특정 소수민족이 특정종교를 신봉하는 ‘全民信教’의 특징을 띠고 있다. 예컨대, 티벳

33) 李瑞環, “宗教問題在許多地方與民族問題交織在一起,” [人民日報], 1993. 1. 20.

족, 몽고족, 태족 등은 거의 라마교를 신봉하고 있고, 위글족, 회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운동은 흔히 종교적 세력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억제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도 민족문제와 종교문제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문제는 국가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sup>34)</sup>

둘째, 1980년대말 이후 구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권 붕괴에는 민족과 종교의 갈등 및 대립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은 중국 지도부에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脫냉전의 국제환경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세계전쟁의 위험은 감소시켰으나 민족과 종교문제로 인한 국지적인 분쟁은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대외적 요인은 중국내에서의 민족과 종교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하는 한편 개혁개방의 분위기를 틈타 서방국가들은 중국사회가 평화적인 체제변화(和平演變)를 유발하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티벳문제, 인권문제 등을 빌미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민족과 종교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사회에 대해 顛覆, 浸透, 和平演變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이 분열되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5)</sup> 1989년 천안문사건 역시 이런 서구의 중국 와해전략에 편승한 국내의 일부 반동분자들에 의한 '動亂'이라고 해석하고 천주교와 기독교의 각종 국내 종교활동과 국제적 교류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셋째, 농촌 지역의 기층 단위에서 당조직의 기능은 약화된 반면에 도교를 비롯한 토착종교와 일부 미신활동이 활성화되고 그 세력이 증대되고 있어 당의 기층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

34) 李瑞環, “在‘新形勢下民族、宗教問題研討班’上的談話,” 中共中央統戰部二局, 中共中央黨校教務部 編(1994), p. 2.

35) 王兆國, “在‘新形勢下民族宗教問題研討班’開學典禮上的談話,” 中共中央統戰部二局, 中共中央黨校教務部 編(1994), p. 15.

고 있다. 前 국가부주석 王震은 내부연설을 통해 이를 봉건세력의 대두로 규정하고 종교활동의 파급효과를 우려하였다. 즉 그는 “당원이나 共產主義青年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 정치활동은 냉대받는 반면에 종교활동은 대중을 사로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인민공사의 집단생산 방식이 폐지되고 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자 과거의 宗族세력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많은 지역에서 이들 종족 집단의 협조없이 는 기층 행정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sup>36)</sup>

넷째, 이런 종교활동에 대해 중국은 통제상의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종교에 대한 관용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통제의 이완 현상도 있으나 관용정책의 근본의도는 종교활동이 통제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율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통제불능’ 상황은 지도부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했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는 선교 및 비합법 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의 단속을 피해 소위 ‘地下教會化’되고 있다. 1990년 12월 ‘全國宗教工作會議’에서의 한 간부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내 교회 종교활동 가운데 약 70%는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다고 한다.<sup>37)</sup>

## 2. 천안문사건 이후 종교정책의 변화: 종교 활성화에 대한 대응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종교활동이 체제 및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sup>38)</sup> 이에 대해 통제 강화와 다

36) 농촌 기층에서의 종교 및 종족 세력의 등장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劉樹, “鄉村宗族勢力的復興,” [中國之春], 1993년 6-7월호; 江振昌, “大陸農村宗族勢力復興與械鬥研究,” [中國大陸研究], 1995년 제2기.

37) [星島日報], 1991. 6. 23; Asia Focus, 1991. 7. 12.

38) 이런 점은 특히 1990년 이후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행한 종교문제에 대한 빈번한 언급과 당정 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잘 나타난다. 예컨대, 1990년 4월 흔히

양한 정책적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무엇보다, 1989년 동구 사회주의 권의 변화와 중국 국내의 천안문 사건은 종교적 적대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가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고,<sup>39)</sup> 종교활동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당과 정부의 주요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다. 이런 정책적 변화는 1991년의 '통지', 1994년의 '규정'과 '조례', 그리고 종교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sup>40)</sup>

### 1) 1991년의 '통지'

상술한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은 1991년 2월에 종교문제에 관한 당중앙 및 국무원의 '통지'("關於進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問題的通知")를 하달함으로써 종교정책의 새로운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는 1982년의 정책과 비교할 때, 다음 몇가지 점에서 보다 통제가 강화된 측면을 지닌다.<sup>41)</sup> 첫째, 모든 종교활동 장소는 법에 근거

---

보수파의 최고지도자로 불리우는 陳雲이 江澤民 총서기에게 종교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진한 편지(陳雲, "關於高度重視宗教滲透問題的信,"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北京: 人民日報社, 1991), p. 1045), 1990년 12월 '全國宗教工作會議'에서의 李鵬 총리의 연설과, 회의 참석자와의 좌담회에서 江澤民 총서기가 행한 연설([人民日報], 1990. 12. 9), 1991년 1월 및 1992년 1월 종교단체 지도자와의 접견에서 江澤民 총서기가 종교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강조한 내용([人民日報], 1991. 1. 31 및 1992. 1. 29), 대표적인 보수파 이론가로 알려진 胡喬木의 내부연설(楊教聲, "秘密教徒遍佈中共各部門," [爭鳴], 1992년 3월호, p. 36), 1993년 1월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李瑞環이 종교계 지도자와의 접견에서 행한 연설([人民日報], 1993. 1. 20) 등이다.

39) 公安部長 陶駟駒는 '6가지 적대세력'(六種敵對勢力) 중 하나로서 '불법' 종교 활동을 지적하였으며(陶駟駒, "防範六種敵對勢力," [九十年代], 1992년 1월호, pp. 27-28), 統戰部 副部長 張聲作은 "국내의 적대세력이 평화적 변혁을 추진하고 침투와 사회 전복을 꾀하는 데에 종교를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天風], 1990년 11월호, p. 6).

40) 이런 변화와 관련하여, 당 내부문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교에 대한) 외형적 완화 정책과 실질적 통제 강화"를 설명한 글로는 Chan Kim-Kwong and Alan Hunter, "New Light on Religious Policy in the PRC," *Issues & Studies*, Vol. 31, No. 2(February 1995), pp. 21-36.

해 등록해야 하고, 새로운 종교활동 장소를 개방할 경우 반드시 縣 이상의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동일하다. 그러나 1982년의 '기본정책'에는 기독교도들의 가정집회를 통한 종교활동을 경직되게 제지해서는 안된다는 유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91년 통지에는 '자칭전도사'의 전도활동과 각종 불법 전도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둘째, 종교단체가 외국의 종교조직 및 인사들을 초청하거나 그들의 초청에 응해 외국을 방문코자 할 때는 省級 지방정부나 국무원 종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섭외활동은 반드시 국무원의 사전 허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인 종교 교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종교관련 행정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기존 1982년 '기본정책'에는 종교계 대표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2년 '통지'에는 각급 지방정부가 국가의 관련법규에 근거해 해당 지역에 맞는 법규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 2) 1994년의 '規定'과 '條例'

이상의 '통지'에 이어 1994년에는 보다 종교에 대한 규제적인 두가지 관련규정이 제정되었다. 하나는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에 관한 제한 규정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활동 장소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 (1) '규정':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sup>42)</sup>

첫째, 외국인은 縣 이상의 지방정부 종교업무부처가 인가한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은 입

41) 보다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熊自健, "近年來中共的宗教政策," [中國大陸研究], 제37권 제7기(1994. 7), pp. 35-43.

42)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 國務院宗教事務局政法司 編, [兩個宗教法規學習宣傳材料](1994), pp. 2-4.

국시 자신이 사용하는 종교관련 용품을 휴대할 수는 있으나, 중국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은 반입을 금지한다. 셋째, 외국인은 중국내 종교활동에 있어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종교조직, 종교업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교 등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신도 증가를 도모해선 안되며 종교종사자들에게 위임하거나 기타 종교활동을 전개해서도 안된다. 그밖에 이를 어긴 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은 중국내에서 법이 정한 특정장소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활동만을 전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도 금지 등 중국인의 종교활동과 격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 (2) '조례': 宗教活動場所管理條例<sup>43)</sup>

첫째, 종교활동 장소내에서 종교활동을 전개할 시 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자도 종교활동 장소를 이용하여 국가통일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시민의 신체건강을 침해하거나,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둘째, 관계 기관과 개인은 종교활동 장소의 관리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상업 및 서비스업의 개설, 전람회 개최, 사진 및 영화촬영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경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과 縣級 이상 지방정부의 종교업무 부처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부처에 가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현급 지방정부의 종교업무부처는 본 조례의 집행상황을 지도 및 감독해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금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엄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同級 지방정부의 법적 처벌을 제청해야 한다. 넷째, 본 조례의 위반 시,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公安 기관의 법적 처벌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형사소추를 각각 행해야 한다.

43) “宗教活動場所管理條例,” 國務院宗教事務局政法司 編(1994), pp. 6-9.

이상 보는 바와 같이, 1982년 정책에서 종교조직으로 하여금 모든 종교활동을 관리하도록 한 것에 비해 1994년의 조례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 공안기관, 사법기관 등에 의해 종교활동이 관리되도록 한층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IV. 종교 통제의 형태: 제도 및 조직적 통제와 지방 행정

##### 1. 제도 및 조직적 통제

###### 1) 제도적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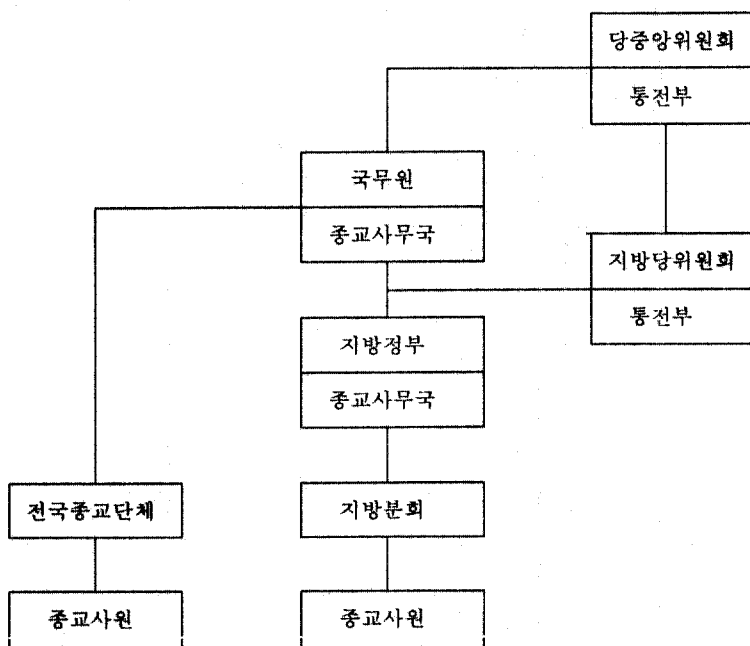
중국에서 종교에 대한 통제는 중앙과 지방 당정 조직의 두 레벨을 통해 행정, 조직인사, 재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업무는 당과 정부의 이중 관리체제하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종교업무가 중앙 단위의 국무원 종교사무국과 지방 단위의 지방정부 종교사무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들 정부 기관은 종교 법령 및 규정의 제정, 정책의 집행과 감독, 종교단체와의 교섭, 신도들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 해외 종교단체의 국내 활동에 대한 통제 등 종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44)</sup>

그러나 이런 행정 계통의 관리체계 외에, 주요 정책의 방침과 원칙에 대한 결정은 당 중앙위원회의 통전부(統一戰線部)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중국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은 당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당 중앙이 관장하는 국가 업무는 政法, 行政, 宣傳, 統戰, 군중단체(群團) 등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흔히 사회통제의 '6大系統'이라고 불리운다. 이 중 통일전선 계통은 대만과 홍콩 및 마카오를 포함한 해외 화교, 각 민족단체, 그리고

44) 陸雲 編(1990), pp. 14.

각 종교조직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지칭하며, 이를 당 중앙 산하의 통일정선부에서 수행한다.<sup>45)</sup> 중앙 통전부는 ‘당의 영도’ 원칙하에 국무원의 종교사무국에서 담당하는 종교에 대한 일상 업무를 지도, 통제하며, 政治協商會議 종교위원회가 담당하는 정책자문 역할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단위에서도 이런 통전부에 의한 종교사무 부처와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지도 및 통제관계는 동일한 체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종교 행정의 조직계통



45) 閻淮, “中國大陸政治體制淺論,” [中國大陸研究], 제34권 제8기(1991.8).

## 2) 종교조직

중국의 각 종교단체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전국 규모의 협회가 있다. 이는 국가의 종교정책 집행을 도와주고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각성을 고양시키며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일종의 어용단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中國佛教協會, 中國道教協會,

&lt;표 3&gt; 중국의 주요 종교단체(1990년 현재)

| 종교단체             | 성격              | 설립일   | 대표자 |
|------------------|-----------------|-------|-----|
| 中國佛教協會           | 각 민족 불교신자의 연합조직 | 1953년 | 趙樸初 |
| 中國道教協會           | 도교신자의 종교조직      | 1957년 | 黎遇航 |
| 中國伊斯蘭教 (이슬람교) 協會 | 穆斯林的 전국적 종교조직   | 1953년 | 沈遐熙 |
| 中國天主教愛國會         | 천주교신자의 애국단체     | 1957년 | 宗懷德 |
| 中國天主教教務委員會       | 천주교의 教務기관       | 1980년 | 宗懷德 |
| 中國天主教主教團         | 각 교구주교의 教務단체    | 1980년 | 宗懷德 |
| 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   | 기독교의 신자조직       | 1954년 | 丁光訓 |
| 中國基督教協會          | 기독교의 教務 기관      | 1980년 | 丁光訓 |

자료: 陸雲 編(1990), p. 9에서 작성.

中國伊斯蘭教協會, 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 中國天主教交友愛國會, 中國天主教教務委員會, 中國天主教主教團, 中國基督教協會 등 8개의 주요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의 五大宗教인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의 각 종교단체들로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신자조직 외에 교무담당 조직을 갖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신자조직이 당과 종교간에 정치적 업무를 주로 다루는 데 대한 신자들의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로써 새로운 독자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외형적이거나 천주교와 기독교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신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6)</sup>

그러나 會長, 主席, 團長 등의 명칭을 가진 이들 각 단체의 대표 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80년초에 설립된 이들 신설단체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 겸직하고 있어 신자조직이나 교무조직은 사실상 동일 종교단체의 산하 기관으로 볼 수 있다.(〈표 3〉 참조) 전국적 규모의 종교 단체 밑에는 각 省, 自治區, 直轄市 단위에 약 160여 개의 종교조직이 있으며, 地(區), 縣급 단위에는 2천여 개의 조직이 있다.

## 2. 지방 정부의 종교 행정과 종교단체의 행태

### : 四川省 道敎의 사례

상술한 바와 같이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정책은 법적, 제도적, 조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정책은 지방 행정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四川省 지역의 도교를 하나의 사례로 하여 지방정부의 종교통제 형태, 지방정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sup>47)</sup> 도교는 기독교 및 천주교와 같은 외래종교가 아닌 토착종교(土生土長)로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이 비교적 적다는 인식하에 중국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종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46) 김창영·조은화(1995), p. 246.

47) 이 부분은 1995년 1-2월 사이에 필자가 사천성(일부 북경 지역을 포함)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현지조사 중 종교관련 정부부처, 도교협회, 도관, 연구소, 대학교 등 약 10여개 기관을 방문하였고, 국무원 종교사무국 간부, 사천성 종교사무국 간부, 사천성 및 북경시 도교협회 행정관리, 도관의 도사, 주요 대학과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 등 약 20여명과 토론 및 면담하였다. 이 글에서는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 기술내용의 구체적인 자료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자 한다.

민간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농촌사회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농촌사회에서 族長의 등장과 함께, 민간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조직이 형성되고 이들의 존재는 소위 鄉鎮 및 村 단위의 '기층사회'(grass-roots community)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대두되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나 상호협력 관계의 구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각종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사천성 지역은 이런 도교의 원류인 五斗米敎의 발생지이며 현재 중국에서 도교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교의 종교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천 지방정부의 도교에 대한 통제와 종교활동은 기타 지역과 타종교에 대한 이해에 하나의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 1) 도교에 대한 행정적 통제

도교의 道士들이 出家시에는 여러가지 행정상의 절차가 필요하며 그 중 특히 村, 鄉鎮, 縣 등 3급 지방정부의 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당국의 허가없이 출가가 어렵고, 지방정부는 허가절차를 통해 출가 도사의 숫적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교의 사원인 道觀에서 각종 종교행사시에도 지방정부의 종교부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의 종교담당 부처에서는 행정관원이 도관에 파견되어 도관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관은 수시로 도관의 일상업무를 종교부처에 보고해야 한다.<sup>48)</sup>

48) 제도적으로 각 종교의 사원, 도관, 교회 등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民主管理委員會(또는 民主管理小組)에 의해 자체 관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 主任 및 副主任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관리위원회는 종교활동, 재무, 생산활동, 종교건물의 신개축, 종교인의 생활 등을 관리하는 종교조직의 기층조직으로 기능한다. 이는 하나의 사회조직으로서 정부 종교부처의 행정관리를 받으며, 이에 근거해 법률과 관련 정책을 통해 종교활동을 관리하나 구체적인 업무는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도교조직

도교의 경우, 중앙기관으로서 中國道教協會가 있고 각 지방에는 分會가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협회는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 도교협회는 각 지방 도관 대표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협회 대표들이 있고 이들은 理事會, 常務理事會, 會長(1인), 副會長(3인), 秘書長(1인), 副秘書長(3인), 顧問(1인) 등을 선출한다. 그리고 약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업무부서가 있는데 이에 辦公室, 敎務處, 研究室, 對外連絡處, 中國道教學院, 中國道教雜誌社, 中國道教文化研究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의 편제일 뿐 지방협회나 道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적으로도 지방도관은 중앙협회에 기부나 상납의 의무가 없고 중앙협회도 지방분회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 지방도관에 대한 재정보조는 지방 종교국을 통한 국가보조가 있을 뿐이다. 소위 “상하 領導關係가 아니라 지도 및 협조관계”라는 중앙과 지방 협회간에는 규모에 있어서 비록 전국적 형태를 띠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느슨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중앙 협회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이며 전체 도관의 이익을 위해 중앙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앙협회는 정부에 의존적이고 도교 발전을 위한 영향력 확보와는 거리가 먼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 3) 재정적 제약

일부 협회 인원은 협회의 자체 재정에서 봉급이 지불되나 상당 부분은 국가에서 봉급이 지급된다. 국가에선 전국규모의 종교단체를 ‘사업단위’로 취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각 인원을 그들의 경력 등에 근거하여 정부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등급별로 대우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특징은 조직과 인사면에서 종교단체가 자율적이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도교를 비롯한 각 종교단체가 재정적으로 자립적이길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교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고 일부는 국가의 보조에 의존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의 재정원천은 신도들의 헌금, 부동산 수입, 일부 종교인의 생산활동 소득, 정부 보조금 등이며, 최근에는 공익적인 서비스 사업이나 기업 경영에 종사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교협회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 도관의 수입이 전혀 중앙에 이관되지 않는다. 이는 불교협회가 각 사찰 수익의 2%를 징수하는 것보다 대조적이다. 중앙의 도교협회가 의존하는 재정원천은 국가보조, 여관운영, 종교유적지 입장료, 국제도교협회의 헌금 등이다.

#### 4) 지방정부의 이중적 정책

지방정부는 제한된 자율과 체제내 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의 종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방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의 세력화를 억제하는 등 종교의 非정치성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일치된 입장을 보인다. 둘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허용한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있어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방의 재정수입을 위해 '宗教의 商業化'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에 대한 통제와 지지라는 지방정부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세력화나 종교의 사회적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도 종교

의 활성화가 사회, 정치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므로 종교 자체의 발전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중앙과 인식상의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에 비해 보다 경제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촌개혁의 초기에 기득권의 상실을 우려한 기층 간부들이 개혁정책의 집행에 소극적이었으나 재정청부제 이후 간부들의 권한과 관료조직의 이익이 보장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변화된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원 종교국의 관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혁 후 국가에서 종교 회복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종교관련 지역은 기존에 공업시설이 주로 배치되어 있었기에 종교시설의 회복은 지방 공업부문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관광산업의 개발 등으로 종교의 활성화가 지방재정 수입의 증대에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四川省 大邑縣의 사례는 이런 경향과 그 배경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대읍현에는 도교의 발생지인 鶴鳴山이 자리잡고 있다. 그 일대는 국가의 측량관련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대읍현 등 사천성의 각급 지방정부는 이것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학명산 일대를 도교의 聖地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유치하면 지방 경제발전과 재정수입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측량연구소의 이전을 국무원 종교국 및 정치협상회의 등 종교담당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민간기업 및 외국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여 문화대혁명 등 종교에 대한 과거 박해 시기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한 현재의 학명산 도관을 개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 연구소에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였고 타지역으로의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

정부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당국은 조만간 자신들의 요구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현행 계획에 의하면, 개발이 완료되면 학명산 도관의 입장료와 기념품판매 수입 등은 도관의 몫으로, 그리고 주변 관광시설의 수익금은 민간투자자와 지방정부간의 투자비율에 따른 배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은 지방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종교활동을 억제하고 통제적이거나 경제적으로는 종교를 활성화시키고 종교단체에 지지적인 이중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중국에서 종교의 활성화가 신앙생활이나 정치적 세력화의 측면보다는 종교의 상업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가 지방 경제발전을 위해 종교의 상업화를 장려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민간의 미신활동도 인정하는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 5) 지방정부와 종교단체의 호혜적 관계

종교단체는 인사조직, 재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부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이다. 종교단체는 정부의 통제에 대해 저항적이기 보다는 협조적이고 타협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측면은 종교수입의 배분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경제적 동기에서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는 종교유적지로부터의 관광수입에 대한 기대에서이다. 종교단체도 지방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北京市 白雲觀의 경우, 음력 1월 1-6일 사이에 舊正 축제로서 廟會를 개최한다. 약 20만 인파가 모이는 종교행사와 문화행사는 도교협회와 북경시 西城區 정부가 주관한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백운관 40%, 區政府 60%, 그리고 행사수익은 도교협회와 구정부가 각각 50%씩 공동분배한다. 약 100萬元 정도로 추산되는 총수입은 종교단체와 지방정부간의 협상에 의해 배분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종교단체의 수익금은 면세이나 지방정부는 각종 명목을 통한 이익금 상납을 받고 있고 이는 종교단체에 대해 행한 지원의 댓가이다.

#### 6) 민간의 종교활동

그러나 중국인들의 현세적인 종교관, 다신교적 특징, 기복신앙의 성격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에서의 종교활동이 급진적인 정치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기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도교의 경우, 도사들의 출신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이며,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보다는 자신들의 현세적 이익 추구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 도관을 찾는 신자들도 개별적인 참배 위주로서 집단적인 모임이나 자체 신도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통상 음력 2월 15일 老子 탄신일과 같은 연례행사시에만 많은 신도들이 참여하는 군중 집회가 개최되고 기타 일상적인 신도모임이나 집단적인 종교활동은 거의 없다. 이는 종교가 조직화 되기보다 개체화되어 있고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V. 결 론

개혁 이후 종교단체는 종교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로 인해 보다 자율이 증대되고 종교활동의 공간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존에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던 종교단체의 재산이 다시 환원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문혁시 파괴되었던 종교건물의 신,개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의 신앙생활과 종교활동도 과거보다 활발해 진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종교단체와 민간신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약받고 있다. 각 종교단체는

행정, 조직인사, 재정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정부에 대한 의존과 예측성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또한 종교활동 역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만큼 조직화, 세력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말 이후부터 중국의 종교정책은 개혁초에 비해 보다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혁 과정을 통해 종교활동이 체제 및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흔히 종교의 발전은 기타 영역에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개혁 이후 중국 사회가 점진적 형태이나 다원주의적 체제로 변화되는 증거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개방 지역과 기독교를 비롯한 특정 종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부분의 중국사회에 있어서 종교활동은 점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통제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그 활동도 비정치적 범위에 제한되어 있다. 종교단체 역시 국가의 통제에 대한 저항이나 대립보다는 타협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써 협조와 기여를 통한 정책적 지원과 생존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은 폴란드 등 동구의 경우와 같이 종교의 발전과 종교활동의 활성화로 인해 중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또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개혁 이후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성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종교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발전과 대중의 정치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중국에서의 시민사회는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양적 발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그다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서구에서의 시민사회 성장과는 다른 '중국적 특색'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단체는 국가의 예측하에 있는 어용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한된 자율하에서 국

가와 공생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종교단체의 경제적 실리와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는 전제하에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 비록 관용과 통제강화의 순환적 반복을 보이고는 있으나 종교에 대한 국가정책은 통제의 기초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국가정책만으로 개혁의 부수적 효과로 야기되는 민간의 의식구조 변화와 갈수록 활성화되는 종교활동을 장기적으로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중국에서의 종교활동이 동구에서와 같은 급격한 체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역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